

“전북 청년 예산 5배 증액을”

김윤덕 의원, “청년정책관 등 신설 통해 문제 해결 필요
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에 과감한 투자 이뤄져야”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청년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전북 청년 예산 5배 증액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에서 전체 3,000억 규모의 청년 예산을 6,000억원으로 두 배 증액하고, 순수 도비는 100억 원에서 5배 증액한 500억원 규모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매년 6,000여명의 전북 청년이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어쩔수 없이 떠나는 선택



이라고 진단했다. 전북 청년은 2020년 7,252명이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등 최근 5년 동안 한 해 6,000여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

전북 청년 인구는 지난 2019년 32만 2,705명, 2020년 31만 5,453명, 2021년 30만 9,204명으로 같은수록 줄고 있다.

최근 전북 청년이 18만명이 붕괴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 정부의 수도권 집중 행정, 국토균형발전 대책 미흡 등

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제가 추진하는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지역인재 광역화를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늘리기에 훈신을 다하고 있다”며 “전북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차원에서는 청년 예산을 6,000억으로 두 배 증액하고,

100억원 내외인 순수 도비는 5배 증액 한 500억원까지 늘려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청년이 청년 정책을 주관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과를 신설해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시 기구를 만들고, 그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에 대해 알아보자’

민주 선대위 전북기본사회위원회, 기본정책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북기본사회위원회(상임 위원장 이원택, 상근위원장 한양환)가 지난 24일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에 대해 알아보는 ‘기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은



기본소득 전문가인 정균승 군산대경 재학과 교수와 기본주택은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시인 강충상 전북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표했다.

정균승 교수는 ‘기본소득’은 유력한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고, 국가 재정과 개인 재정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며, 재원마련 등에 대한 설명을 알기

등한 금융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본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충상 공동위원장은 이재명후보의 주택정책의 기본방향과 주택보급율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얘기했다.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게 더 좋고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책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정책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를 위해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뛰자”고 밝혔다.

한편, 전북기본사회위원회는 이번 한주간 동안 지역회피로 장보기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국가 희생·공헌자 장례 서비스 지원

민주 신영대 의원, 장사 등 관련 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산)은 25일 국가 희생·공헌자의 장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준이 지난 상태에서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11월 법제처는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 시설로 옮길 때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혁행법상 화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이 되는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 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을 할 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애 마지막 이우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만경강 테라시티 공동 공약화 제안”

조지훈 전 경진원장, 전주·익산·완주 지자체장 출마예정자에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익산시장 및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들에게 전주·완주·익산 경제통합(‘만경강 테라시티’) 공동 공약화를 공개 제안했다.

25일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만경강 테라시티 공동 공약화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기 위해 도시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신각에 전주·익산시장 및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들에게 만경강 테라시티 공동 공약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만경강 테라시티는 한 마디로 전주·완주·익산을 이루는 경제통합

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전략이 담겼다.

그는 “특별자치단체 설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안 시행으로 가능해진 데다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초광역협력 중심으로 펼쳐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구역통합

은 한가한 소리로, 이제는 소모성 논

쟁에서 벗어나 지역 간 특별자치체 구

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미련해야 한다”면서 만경강 테라

시티 공동 공약화를 제안한 이유에 관

해 설명했다.

지리적으로 생활·경제권이 연결된 전주와 완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익산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함께 상생의 경제통합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김윤상 기자

국힘 전북도당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출범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전북도당 장애인복지지원본부가 출범했다.

25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정운천 도당위원장, 이종성 장애인 선거 대책본부장, 김양옥 도당 장애인위원회 등 장애인 위원회와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김양옥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

고 장애인의 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할 수 있다”며 “전북에서도 장애인들이 일어나 득표율을 올려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비대면으로’

도선관위, 코로나19 확산 상황 고려 동영상·전화 등으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 집합 방식의 설명회가 아닌 전화·동영상 등을 이용한 비대면·개별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및 15개 구·시·군선관위는 부득이하게 집합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지만,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개별 안내도 병행하므로, 안내를 원하는 입후보예정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등록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5월 11일까지 실시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와 교육감선거는 2월 1일,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구 시의원, 시장선거는 2월 18일, ▲지역구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 20일부터 시작한다.

전북선관위는 원활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입후보예정자들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시청, 사전 문의,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부 공동 주최로 25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험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균형발전 국민 공감대 확산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부 공동 주최로 25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1월 29일로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 법정기념일로 해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회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부 공동 주최로 25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물론, 더욱 깊은 지역주의의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 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물론, 더욱 깊은 지역주의의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조봉업 도행정부지사는, “중앙·지방과 지역간 긴밀한 협력관계와 함께 무엇보다 지역 고유지를 존중하는 균형발전정책이 차기 정부에도 국정철학으로 자리매김돼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환경정책 새로운 활용

제로웨이스트 정책 토론회

민주 도당 해시태그 선대위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오늘 환경 활동가와 제안 공유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슈 발굴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에서 ‘환경정책 새활용! 제로웨이스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6일 오후 4시 공유공간 둥근술에서 열리며,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의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환경 활동가들의 제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인류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며 중대한 문제”라며 “제로웨이스트 같은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운동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구적 차원으로 떠오른 탄소중립을 더욱 앞당겨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는 제로웨이스트 정책 토론회 외에도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첫 선거단’ 정책 발표인 ‘유니버설 디자인’ 필요와 빙향성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후에도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전환적 이슈와 정책을 제안하며,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시태그 선대위 환경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 김창하 공동선대위원장, 전북도당 선대위 이명연 상임총괄본부장, 김진옥 전주시의원, 전북의 환경 활동가들이 참석한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